

대학경쟁시대, 발전유도하는 필요악

4. 대학 평가인정제의 허와 실



시리즈 오늘의 대학

대학평가인정제 개요

대학도 시험을 치른다면? 무슨 이야기냐고 반문할지 모르지만 앞으로 모든 대학들은 주기적으로 시험과도 같은 평가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점수가 매겨진다. 그리고 그 성적에 따라 상위권의 대학에는 더욱 많은 예산이 주어지지만 그렇지 못한 대학은 단연 열등생으로 전락해 버릴지도 모른다. 바로 '대학평가인정제'가 이것이다.

이 대학평가인정제가 각 대학마다 학부의 중심사조나 특색이 다른데도 그 시기와 방향을 놓고 많은 학계가 고심하고 있다. 대학종합평가제는 그동안 양의 평정에만 급급했던 대학의 질을 높이고 자율성을 확대시킨다는 기본취지에 오래전부터 논의되어온 제도이다. 그동안 시기상조라는 반대 속에 시행시기를 놓고 논란이 있었지만 지난 91년 도입된 학과평가제와 더불어 94년부터는 전국의 거의 모든 대학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교육개발을 앞둔 상황에서 각 대학들이 대학개혁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짧은 시간안에 평가에 맞는 조건을 갖추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대다수 대학의 고충이 지적되고 있다.

대학평가의 역사

실질적인 대학평가의 시점은 91년 교육부 대학교육위원회(이하 대교위)가 '학과평가제'를 실시하면서부터지만 이전 82년부터 대교위가 학과평가를 단독으로 하기도 했었다. 그러나 평가방법상의 문제와 일부 대학의 반발로 인해 공개는 물론 대학지원자료로도 활용되지 못했던 것이 91년에 정식으로 학과평가제라는 이름으로 시행된 것이다. 처음 92년에는 물리학과와 전자공학과를 대상으로 첫 평가가 이루어졌고 93년에는 화학과와 기계공학과를 대상으로 그리고 올해에는 생물학과 화학공학과가 그 평가의 대상에 올라갔다.

이제 평가는 6개 영역의 기준에 따라 우수, 양호, 미흡 세 가지로 나누어 평가하도록 하였고 우수평가를 받은 학교는 공개토록 하였지만, 시행초기의 부작용과 함께 평가자에게 대한 찬반 양론이 되자나오기 시작됐다. 각 대학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평가라는 비판과 함께 우수평급에 대한 불만도 커져서 주어진 것은 인위적인 외부 현상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문제제기가 대두되고 있다.

대학은 지난해 대학종합평가인정제를 따르던 94년 부터 96년부터 실시하기로 하고 평가방향을 각 대학이 동등하게 줄 것을 요청했다. 그 결과 올해는 비교적 규모가 큰 서울대, 경북대, 충남대, 부산대, 전북대, 전남대 등 국립 6개교와 사립대 10개교는 포항공과대가 평가를 받고 대다수 대학들은 95년부터 대학실정에 맞게 평가시기를 선택하였다. 그리고, 이미 시행되고 있던 대학평가제는 교육부의 학과평가기준에 따라 제별별 평가로 바뀌며 95년엔 인문계로는 처음으로 경영학 계열이 학과평가 대상에 올랐다.

대교위는 대학평가제를 시술로 앞장서 시행하게 된 이유는 교육개발을 앞둔 시점에서 대학이 위기를 맞고 있다는 사실에 사회적으로 공론화되고 있는 것과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평가를 통한 질적 발전의 유도가 시급하다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물심는 순서

1. 재정능력 허약하는 사립 대학
2. 계열화 심화비결과 전방 대학자율화하는 요란한 공언
3. 대학평가인정제의 허와 실
4. 신학원들
5. 지방대학들
6. 지방대학들 정책 성공했는가

그것이 심각한 만큼 대학평가도 얼마나 내실있고 효율적이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점은 평가제의 실시시기와 평가 방법 등에 따라 좌우될 수 밖에 없다. 평가는 우선 6개 영역에 1백 개 항목으로 기준을 세운 것으로, 영역별로는 교육(120점), 연구(70점), 사회봉사(30점), 교수(80점), 시설설비(1백점), 재정과 경영영역(1백점) 등 총 6백 점 만점으로 구분하였고, 각 대학의 자질평가 자료와 방문

직으로 심사하며 평가받은 대학은 7년동안은 그 효과를 인정받게 될 것이라고 한다.

자율성증진의 요건

그동안 무사안일주의와 특징 없는 부패논리에 전향한 대학이 사실상 발가벗기고지고 그동안의 폐쇄성을 극복하는 것은 자율적인 대학운영을 위해서라도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뿐만 아니라, 평가제 시행으로 소위 일·이류로 분류된 대학사회의 현실을 직면하도록 하는 계기가 마련 되었다는 점과, 공인된 평가결과를 가지고 내실 있는 유망한 학교에 지원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볼 수 있다. 더불어,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대학이 스스로 살아남기 위한 자기발전책을 마련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 평가제의 시행을 앞두고서 긍정적인 면으로 부각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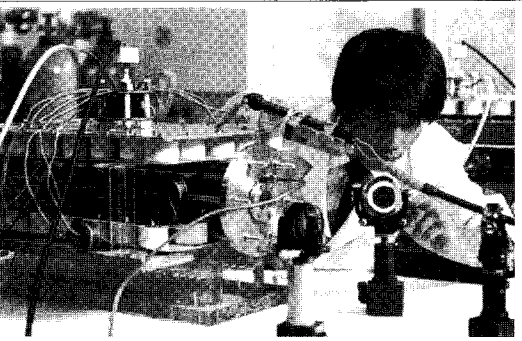
평가 기준의 부작용

그러나, 대다수 많은 대학들이 이 평가제의 도입 취지에

맞게 바뀔 수 없다는 현실에 있어 7년동안은 그 효과를 인정받게 될 것이라고 한다. 평가가 사립대학의 여가에서 보았듯이 평가자의 역기능이 자칫하면 대학간과 학내분규의 씨앗이 될 소지를 충분히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평가제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평가주체의 재관심, 공정성 확보와 기준치의 모호함을 들 수 있다. 평가를 담당할 곳은 대학교육정책위원회로 있는 대학평가인정위원회가 93년에 발족되어 있는데, 본래는 위원회의 논의적이고 실행적인 평가활동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운영이 확보와 인력수급이 우선시되어야 하는 것이 관제자들의 지적이다. 기준치의 모호함은 각 대학 학위 취득과 사립대학의 경우가 다르고 단과대, 개방대의 평가가 서로 상이한 현상에도 기준치의 무의미함이 드러난다.

또한, 실제로는 평가제의



과 특수성을 무시하고서는 올바른 결과를 내놓을 수 없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장 크게 열리고 있는 평가후의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다. 평가가 '인정', '불인정'의 두가지로 구분되어진 경우 '불인정'대학이 받은 불이익과 상대적인 막달감, 나쁜 사회의 반응은 그 대학의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이렇듯 올바른 평가제 정착을 위한 주요과제이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다면 일관된 환경에 놓여있기 때문에, 실제로 92년 물리, 전자공학과와 화학공과를 받은 대학에서 과다한 출혈을 겪을 것이라는 심층분석을 들어오는 것은 설사 무리일지 모르나, 심층분석을 받아야한다는 사과의 위기감을 역설해 보여준 경우이다.

이때문에 많은 사립대 관계자들은 "대입평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다른 관정을 받게 될 경우 영원히 불평등을 겪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크게 걱정하고 있다. 이에 관해서도 불인정 관정을 받은 대학에 대한 지원책은 다시금 심사숙고해보아야 할 문제가 아닌가 여겨진다. 이러한 여러가지 역기능과 발목을 잡는 문제점들을 짚어보는 것은 이것들이 올바른 평가제 정착을 위한 주요과제이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다면 일관된 환경에 놓여있기 때문에, 실제로 92년 물리, 전자공학과와 화학공과를 받은 대학에서 과다한 출혈을 겪을 것이라는 심층분석을 들어오는 것은 설사 무리일지 모르나, 심층분석을 받아야한다는 사과의 위기감을 역설해 보여준 경우이다.

교과 학생들의 시행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학교안이 앞지러가는 모습은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난 9월 서울캠퍼스에서 교수, 직원, 학생, 동문들이 모여 열린 공청회를 통해 지적되었듯이 '성취발달계획'의 완성도 또한 재정확보방안, 당대 주체의 설정도 중요하지만 학교구성원들의 합의에 기초한 노력들이 가장 기본이 되는 요건이라 할 수 있다.

우수대 위주의 '빈익빈 부익부'현상, 대학 차별화 우려 대학발전 기여불구 '탈락' 근심으로 사학 전전긍긍



우리 학교의 평가준비

대학종합평가제도는 우리학교에도 발동해 들어간 것이다. 이미 서울캠퍼스는 95년 3월 평가에서 92년 물리학과, 전자공학과 93년에 화학과, 기계공학과 모두가 상위학과 평가를 받은 중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내실있는 학과로 인정을 받았지만, 한두개과가 아닌 전체대학을 평가하는 대학평가제에도 우수한 평가를 받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오히려 최근 언론의 보도들을 통해서 보면 마치 지적되어야 할 부분이 더 많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한다.

현재 우리학교는 대학평가를 대비해 대학종합평가기 관련 사무국을 설치하고 정비발전 5개년 계획을 내놓고 있다. 경희발전 5개년계획에는 '대학의 세계화', '학문의 선진화', '경영의 효율화', '조직의 자율화', '교육의 인간화', '사회기여의 활성화'의 6가지를 중점사항으로 마련하고 있다. 더불어, 이미 도입한 교수 계약제, 교수일제평가와 연구, 강의 전담교수제 그리고 학과통폐합에 따른 계열별 교과제, 교과과정개편, 영어나 컴퓨터의 출결기록 요건화 등을 5개년계획에 마땅한 채는 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논란이 되고 있는

대학종합평가제도의 실시여부를 떠나서라도 더이상 자기 만족적인 대학은 존속할 수 없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더이상 대학들도 이익만을 추구하는 경제논리와 논리의 실체에 급급해 하는 형태를 벗어나야 한다. 또한 평가 성격과 면을 위한 주무관직 준비와 관련 진정한 대학발전을 위한 것인지 재고해볼 일도 있다. 국가가 담당해야 할 부분도 매우 크다. 여러차례 지적해왔듯이 대학평가가 평가만을 위한 평가로 전락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리고,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대학자율화의 보장과 사립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의 확대가 필수요소라고 말할 수 있다. 이제 중점적 실존지 대학평가제의 주주라는 이미 던져졌다. 대학제에 여건과 환경의 악조건속에서 대학평가를 하나의 필요악(?)으로 보던지 혹은 최선의 방안이라고 여겼던지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어차피 그 것이 각 대학이 가져야 할 부분이라고 본다면 대학합정평가제에 대해선 긍정하고 솔바르게 자리매김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인 것이다. (송보문는 논설위원)

7. 정보화 시대의 사람들

8. 정보화 시대의 사람들

9. 정보화 시대의 사람들

10. 정보화 시대의 사람들

현대자동차
세계 171개국 총 300만대 이상 수출

현대건설
세계 25개국 총 25억 달러 공사 완공
건설대금총액 1위

현대전자
세계 매출액 1위
2000년 세계 10대 부품기업 선정 목표

이산사회복지사업재단
130억 매출액의 사회복지
총액 7,619억원

18만 현대인의 참모습입니다.

그들은 크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개인의 이익보다는 국가·국민에게 온 힘을 쏟아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키는 큰 꿈입니다.

그들은 넓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신기술·신제품 개발을 무기로 세계 176개국과 교역 HYUNDAI KOREA를 겨루는 곳까지 진출하는 국제화의 기수입니다.

그들은 깊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무한 잠재력을 끊임없이 개발하고, 그들이 맺은 넉넉한 결실을 이웃과 더불어 나누는 사람들입니다.

보다 중요로 삶을 선택하기 위해, 그들 18만 현대인의 노력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